

KIEP

지역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10년 7월 23일
ISSN 1976-0507 Vol. 4 No. 33

일본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김 규 판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부연구위원 (keiokim@kiep.go.kr, Tel; 3460-1017)

■ 지난 6월 22일 간 민주당 내각은 재정건전화 목표를 담은 재정운영전략을 발표함

- 이번 재정운영전략의 요체는 GDP 대비 기초 재정수지의 적자 비율을 2015년까지 2010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목표 달성을 위해 세출삭감과 세입확보에 매진하겠다는 것임.
- 그러나 한편에서는 과거 재정개혁의 실패 경험으로 이번 재정운영전략과 재정건전화 목표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하고 있음.

■ 일본의 국가채무는 2009년 말 현재 871조 엔으로 GDP 대비 189%에 해당하며 수치상으로는 그리스 등 남부유럽 국가보다 심각함.

- 그러나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와 대외순자산 보유에 힘입어 국가부도와 같은 극단적인 사태는 상상하기 어렵고, 오히려 일본 국내에서는 국채의 내국인 보유와 저금리 기조를 배경으로 정부의 국채발행에 그다지 거부감을 갖지 않는 기류가 강함.
- 그럼에도 최근에는 고령화에 따른 저축률 감소가 국채의 국내소화를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금리인상과 재정부담 증가로 연결될 것이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어 재정구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정부가 장기불황 국면에서 재정규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재정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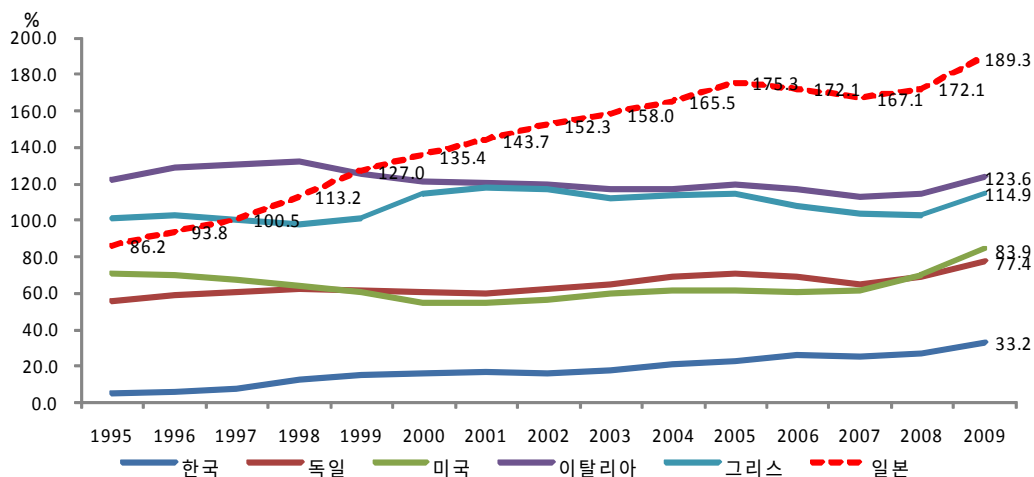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일본의 재정현황

■ 수치상으로는 남부유럽 국가보다 일본의 국가채무 문제가 더욱 심각

- 일본의 국가채무¹⁾는 1990년대 말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9년 말 현재 871조 엔, GDP 대비 189%에 해당함.
- 2010년 상반기에 그리스를 비롯한 남부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세계경제에 커다란 악재로 등장하였는데, 수치상으로는 남부유럽 국가보다 일본의 국가채무 문제가 더욱 심각함.
- 일본의 국가채무 누적은 1990년 대 버블붕괴 이후 정부의 경기대책 실패에 따른 재정 적자 심화와 고령화에 따른 세출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그림 1. 세계 주요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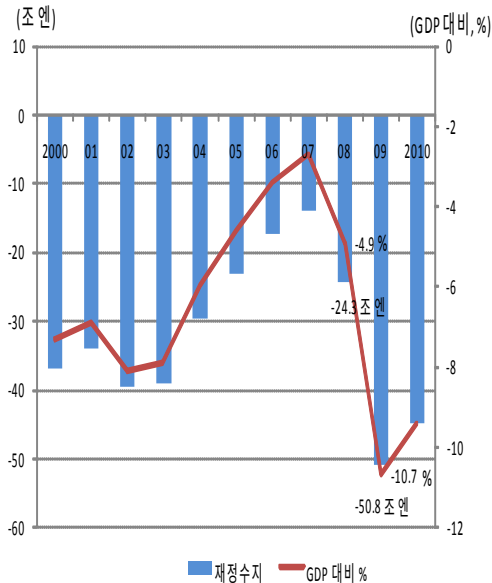


자료: OECD(2009. 11), *Economic Outlook*, No.86.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는데, 2009년에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0.7%(적자규모: 50.8조 엔)에 달하였고, 사상 처음으로 국채의 준도가 50%를 초과함.
- 2010년의 경우, 고령화, 각종 경기대책, 어린이수당·고속도로요금무료화 등과 같은 정권교체 후의 신정책으로 본 예산상 세출이 사상 최고치인 92.3조 엔으로 증가하였고, 신규 국채발행액도 총 44.3조 엔(국채의존도: 48.0%)을 계획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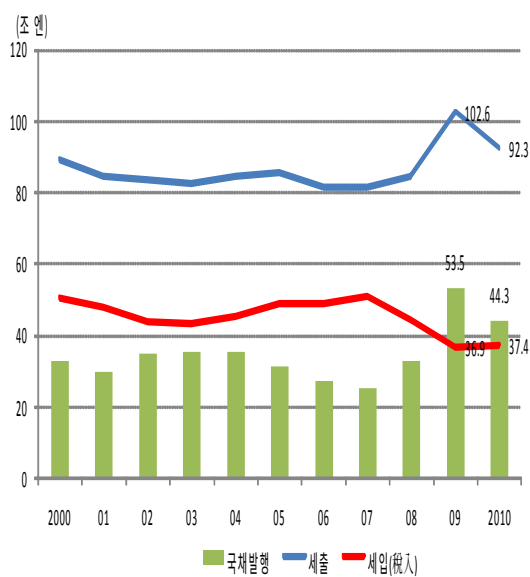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으로 구성된 일반정부의 채무를 의미하고, 공기업 채무는 포함하지 않음.

그림 2. 일본의 재정수지 추이



주: 2009년 이후는 내각부의 추계치임.
자료: 内閣府.

그림 3. 일본의 일반회계 세출·입 및 국채발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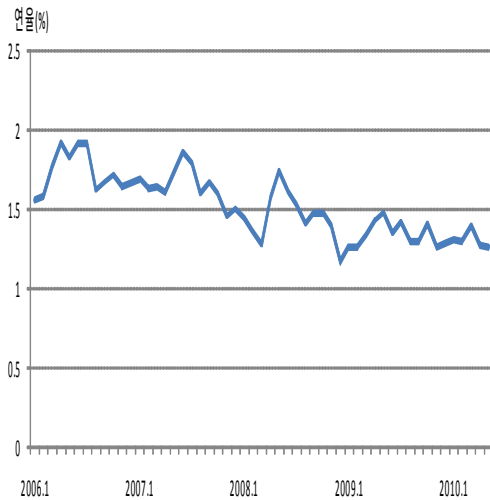
주: 2008년까지는 결산, 2009년은 2차 추경 후 예산, 2010년은 본예산기준임.
자료: 財務省.

- 특히, 민주당 정권은 정권교체 후의 신정책 추진에서 항상 재원조달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데, 2010년도 본예산에서는 특별회계 적립금 10.6조 엔을 주요 세입원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나, 2011년도 이후에도 이러한 재원이 확보될 지 여부는 불투명

■ 일본은 국가채무 비율은 높지만 당분간 재정위기 가능성은 극히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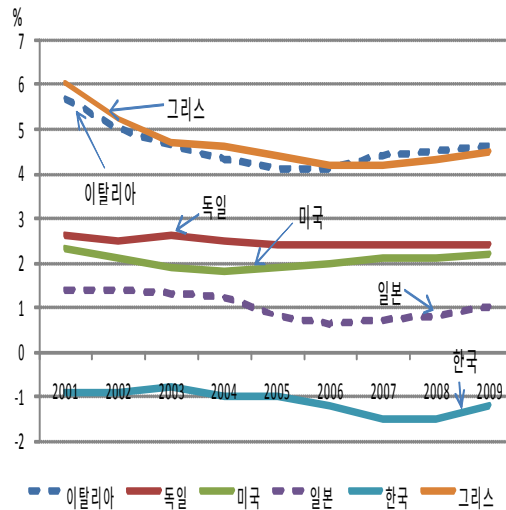
- 일본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지만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와 대외순자산 보유에 힘입어 국가부도와 같은 극단적인 사태는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음.
- 2009년 일본의 경상수지는 13.3 조 엔(약 1,400억 달러)의 흑자를 시현하고 연말 대외순자산은 266조 엔(약 2.8조 달러)에 달함.
- 일본정부의 국채이자부담은 저금리 기조로 G-7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
- 일반적으로 국가채무 증대는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금리가 상승하기 마련이나, 일본의 국채금리(신규발행 10년물 기준)는 1990년대 말부터 2% 아래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10년 들어서는 1.2~1.3%대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본정부의 순(net)금융부채에 대한 국채이자부담은 GDP 대비 1% 수준에 그치고 있고, 이는 그리스(2009년 4.5%)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G-7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임.

그림 4. 일본의 국채(신규발행 10년물)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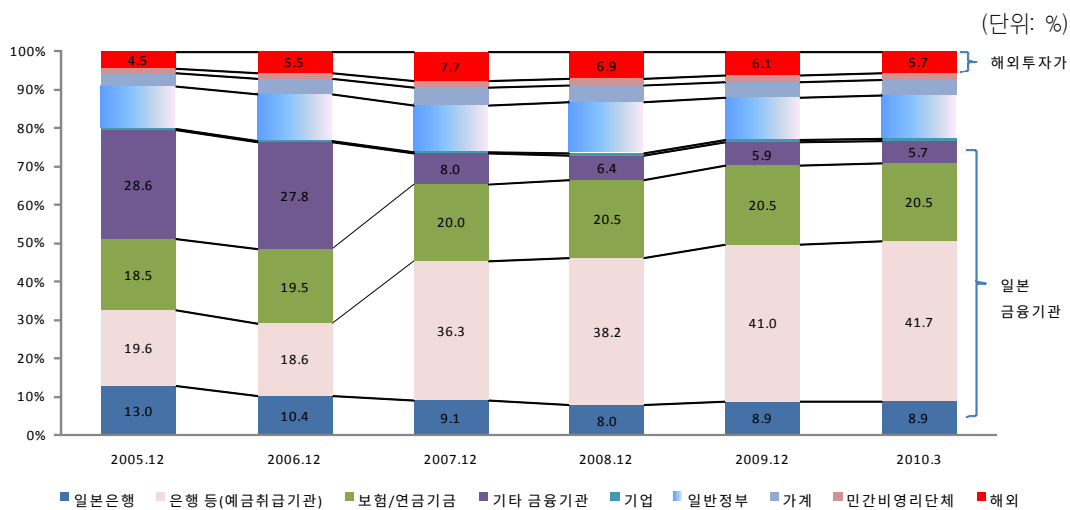
자료: 日本銀行.

그림 5. 세계 주요국의 GDP 대비 국채이자부담(net) 비율

자료: OECD(2009. 11), *Economic Outlook*, No.86.

- 일본의 저금리 기조는 디플레이션 지속, 기대성장률 저하,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책 등과 같은 거시경제 환경에서 비롯되고 있으나, 국채가 거의 국내에서 소화되고 있다는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음.
- 2010년 3월 말 현재, 전체 국채잔액 834조 엔 가운데, 국내금융기관의 보유비율 76.7%를 포함하여 국내 투자가의 보유비율이 94.3%에 달하고 있는 반면, 해외투자가는 나머지 5.7%(47.3조 엔)에 불과함.

그림 6. 일본 국채의 투자자별 보유구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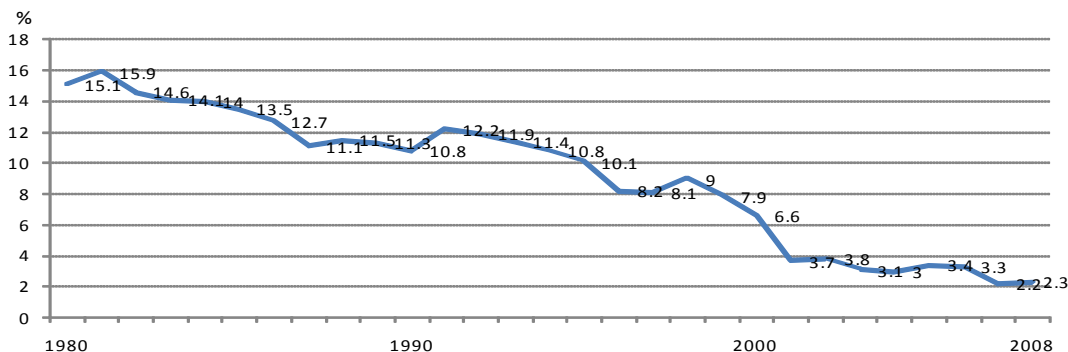
주: 국채에는 국고단기증권과 국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채권을 포함(지방채, 정부관계기관채는 제외).
 자료: 日本銀行, 資金循環.

-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때 해외투자자의 일본 국채 보유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 2009년 말 기준으로 미국 47.7%, 영국 32.0%, 독일 53.8%, 프랑스 34.7%로 조사됨.

■ 국채부담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논란

- 일본의 국채비율이 위험수위에 달했음에도 정부의 국채상환 부담이 적고, 국채의 대부분을 내국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일본 내부에서는 국채발행에 거부감을 갖지 않는 기류가 의외로 강함.
- 첫 번째 입장은 국채를 모두 내국인이 보유하면, 국채는 국민의 부채임과 동시에 자산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국채발행으로 국민의 부담이 추가되거나 현세대에서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되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임.
- 두 번째 입장은 불황기에는 국채발행에 의한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미미하여 국채발행을 통한 정부 투자 혹은 소비의 내용에 따라서는 재정정책의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입장임.
- 그러나 근본적인 재정구조 개혁이 지연될 경우에는 국채발행이 누적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三菱東京UFJ銀行(2010)은 정부가 소비세를 5%로 유지하고 기업의 저축초과 현상이 완화되는 경우, 고령화에 따른 저축률 저하는 국채의 국내 소화율을 2015년 40%대, 2020년 20%대 미만으로 하락시켜, 저축률 저하가 궁극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함.

그림 7. 일본의 가계 저축률 추이



주: 저축률=(가처분소득-개인소비)/가처분소득 ×100.

자료: 日本銀行, 資金循環.

-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의 함의는 재정구조 개혁 없이는 고령화와 함께 국채의 국내소화율이 저하됨에 따라 금리인상 압박 요인이 가중되어, 결국 정부의 국채비용이 증가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기 힘들 것이라는 데 있음.

2. 민주당 정권의 재정건전화 계획

- 2010년 6월 출범한 간 나오토(菅直人) 민주당 내각은 지난 6월 22일 재정운영전략을 각의(閣議) 결정함으로써, 재정건전화와 관련된 중장기 플랜 및 재정운영 방침을 밝힘.
- 이번 재정운영전략은 중장기 재정건전화와 관련된 수치 목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규칙(fiscal rule), 그리고 2013년까지 3년간에 걸친 중기재정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첫째, 중장기 재정건전화 목표는 GDP 대비 기초 재정수지²⁾의 적자 비율을 2015년까지 2010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2020년까지는 흑자화하며, 2021년 이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임.
- 이번 재정건전화 목표는 지난 2006년 고이즈미 내각이 제시한 재정건전화 목표와 본질적인 차이는 없고, 목표 달성 시기만을 몇 년 뒤로 미루고 있음.
- 고이즈미 내각은 기초 재정수지를 2011년까지 흑자화하고, 2015년 이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³⁾

표 1. 재정운영전략상의 재정건전화 목표

세부 목표	내용
(1) 수지(flow) 목표	- 중앙·지방 정부의 기초 재정수지는 GDP 대비 기초 재정적자 비율을 2015년까지 2010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늦어도 2020년까지는 흑자화 - GDP 대비 중앙정부의 기초 재정수지도 늦어도 2015년까지 2010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늦어도 2020년까지 흑자화 - 2021년 이후에도 아래 잔액 목표의 달성 상황을 감안하면서 재정건전화 노력을 계속
(2) 잔액(stock) 목표	- 2021년 이후 국가채무 잔액의 GDP 대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춤.

자료: 首相官邸, 「財政運営戦略」.

2) 기초 재정수지(primary fiscal balance)란 '차입금을 제외한 稅收 등의 수입'에서 '기존 차입금에 대한 원금·이자 상환액을 제외한 세출'을 차감한 값이고, 기초 재정수지의 균형은 매년 정책적 경비가 稅收로 충당되고 있음을 의미함.

3) 2006년 7월 고이즈미 내각이 각의(閣議) 결정한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6'(骨太の方針 2006)임(<http://www5.cao.go.jp/keizai-shimon/minutes/2006/0707/item1.pdf>).

- 둘째, 이번 재정운영전략이 제시하고 있는 재정규칙은 재원확보 원칙, 재정적자 삭감 원칙, 구조적 재정지출에 대한 재원확보 원칙, 세출삭감에 대한 기본원칙,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 원칙 다섯 가지로 구성됨.
- 재원확보 원칙이란 ‘pay as you go 원칙’으로서, 세출 증가 또는 세입 감소를 수반하는 정책을 새로 도입하거나 확충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항구적 세출 삭감 또는 항구적 세입 확보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임.
- 재정적자 삭감 원칙이란 국채발행액 삭감, 국채의존도 인하, 기초 재정수지 개선 등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원칙을 말하고, 구조적 재정지출에 대한 재원확보 원칙이란 연금, 의료 및 간병 보험과 같은 구조적 사회보장비용의 재원확보를 위해 세입·세출 개혁을 단행한다는 원칙을 말함.

표 2. 재정운영전략상의 재정규칙

주요 원칙	내용
(1) 재원확보 원칙 (pay as you go 원칙)	- 세출 증가 또는 세입 감소를 수반하는 정책을 새로 도입하거나 확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항구적 세출 삭감 또는 항구적 세입 확보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함.
(2) 재정적자 삭감 원칙	- 경기순환 등과 같은 요인도 감안하되, 원칙적으로 국채발행액 삭감이나 국채의존도 인하, 기초 재정수지 개선 등 재정상황이 개선되도록 예산을 편성함.
(3) 구조적 재정지출에 대한 재원확보 원칙	- 연금, 의료 및 간병 보험 급부 등의 사회보장비와 같은 구조적 재정지출 증가요인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개혁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감.
(4) 세출삭감에 대한 기본원칙	- 특별회계를 포함한 모든 세출 분야에서 사업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필요성, 집행의 효율성 등을 부단히 점검하여, 불필요한 세출삭감과 예산의 재편성에 만전을 기함.
(5)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 원칙	- 정부는 지방재정의 자주적이고 안정적 운영에 배려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훼손되거나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시책을 시행해서는 안 됨.

자료: 首相官邸, 「財政運営戦略」.

- 셋째, 중기재정 프레임⁴⁾에서는 신규 국채발행의 억제, 세제개혁, 기초 재정수지 대상 경비⁵⁾의 지출 억제 등 2011년부터 3년간에 걸쳐 시행할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함.
- 이번 중기재정 프레임은 2011년부터 3년간 매년 신규 국채발행규모를 44조 엔(2010년 수준) 이하로 억제하고, 기초 재정수지 대상 경비도 2010년 수준(71조 엔) 이하로 억제하겠다는 세출 축소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한편, 재원확보와 관련해서는 소비세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제개혁에 대한 구체적 내용

4) 단년도 예산주의가 갖는 경직적 세출 계획이나 예산의 이월금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을 예산 주기로 설정한 다음, 그 기간 내의 재정운영 방침을 제시한 것임.

5) 정부의 일반회계 세출 가운데 국채상환비 및 결산부족보전전입금을 제외한 금액.

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표명하는 데 그침.

표 3. 중기재정 프레임

재정운영 기본 방향	내용
(1) 국채발행액의 억제	- 2011년의 신규 국채발행액은 2010년 예산 수준(약 44조 엔)을 초과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함. 그 이후의 신규 국채발행액도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축소하고, 억제에 전력을 다함.
(2) 세입 측면에서의 조치	- 개인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재산세 등 세제의 근본적 개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조만간 책정함. 이러한 세제 개혁을 통해 재정건전화 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세입을 확보해 감. - 조세특별조치는 2010년 세제개정 방침에 의거하여 백지상태에서 재검토
(3) 세출 측면에서의 조치	-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초 재정수지 대상 경비'는 항구적으로 세출을 삭감함으로써, 적어도 전년도 본예산의 '기초 재정수지 대상 경비' 규모(이것을 '세출의 큰 틀'이라 함)를 실질적으로 초과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함. - 지방의 일반재원 총액은 상기 기간 중, 실질적으로 2010년도 수준을 확보 - 제도 개혁으로 항구적으로 세입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상기 '세출의 큰 틀' 금액에 가산하고, 세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국채발행액의 억제에 활용함.

자료: 首相官邸, 「財政運営戦略」.

3. 재정건전화 계획에 대한 평가

■ 재정건전화에 대한 의지 표명 자체는 매우 중요

- 이번 재정운영전략은 2009년 9월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이룬 다음 처음으로 발표한 재정건전화 계획인데다, 간 내각이 하토야마 내각(2009. 9 ~ 2010. 6)의 내수확대 정책을 탈피하여 재정건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음.
- 지난 7월 11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 기간 동안, 간 총리는 재정운영전략에 명시하지 않았던 소비세율 인상(5% → 10%)의 필요성과 함께 이를 논의하기 위한 초당파적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등 재정건전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표명하기도 함.
- 지난 6월 27일 G-8 정상회의가 채택한 선언문에서도 다른 선진국의 경우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채택하였으나, 일본에 대해서는 간 내각의 재정건전화 목표를 예외적으로 인정함.

■ 재정운영전략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대두

-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책정한 재정건전화 계획은 경기변동은 물론 내각 교체에 따른 정책의 불연속성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패한 바 있음
- 1997년 하시모토 내각은 2003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하로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한 재정구조 개혁을 선언하였으나, 아시아 금융위기와 일본의 금융위기로 1998년에 재정구조개혁법 수정으로 재정개혁을 중단하였음.
- 고이즈미 내각의 재정개혁 역시 2008년 9월 아소내각의 출범과 동시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세출삭감에 대한 반대여론 비등으로 좌절된 바 있음.
- 이번 재정운영전략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출삭감과 세입확보에 대한 구체적 수단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행여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음.
- 세출삭감과 관련해서는 기초 재정수지 대상 경비를 2011년부터 3년간 71조 엔 수준 이하로 억제하겠다는 원칙만 제시한 채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소비세 인상폭 등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음.
- 이에 반해, 고이즈미 내각은 재정건전화 목표로서 2011년까지 기초 재정수지의 흑자화를 설정한 다음,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출삭감 11.4조~14.3조 엔, 증세 2.2~5.1조 엔이 필요하다고 명시함.

표 4. 고이즈미 내각의 '기본방침 2006' 과 간 내각의 '재정운영전략' 상의 세출계획 비교

[기본방침 2006]

(단위: 조 엔)

[재정운영전략]

(단위: 조 엔)

	2011년			2011	2012	2013
	개혁 전	개혁 후				
사회보장	39.9	38.3(-1.7)	기초 재정수지 대상 경비	71	71	71
인건비	35.0	32.4(-2.6)	경제위기대책 · 지역활성화 예비비 등			
공공투자	21.7	16.1~17.8(-5.6~-3.9)		1.0	1.0	1.0
기타분야	31.6	27.1~28.3(-4.5~-3.3)				
합계	128.2	113.9~116.8(-14.3~-11.4)				

주: () 안은 삭감액(조 엔).

자료: 「經濟財政運営と構造改革に関する基本方針2006」(2006.7.7); 「財政運営戦略」(2010.6.22).

- 이번 재정운영 전략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규칙으로서 “pay as you go” 원칙의 준수를 제시하고 있으나 일본의 재정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강함.
- 1990년 제정된 미국의 예산집행법(BEA90)은 이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클린턴 정부의 재정수지 흑자 전환에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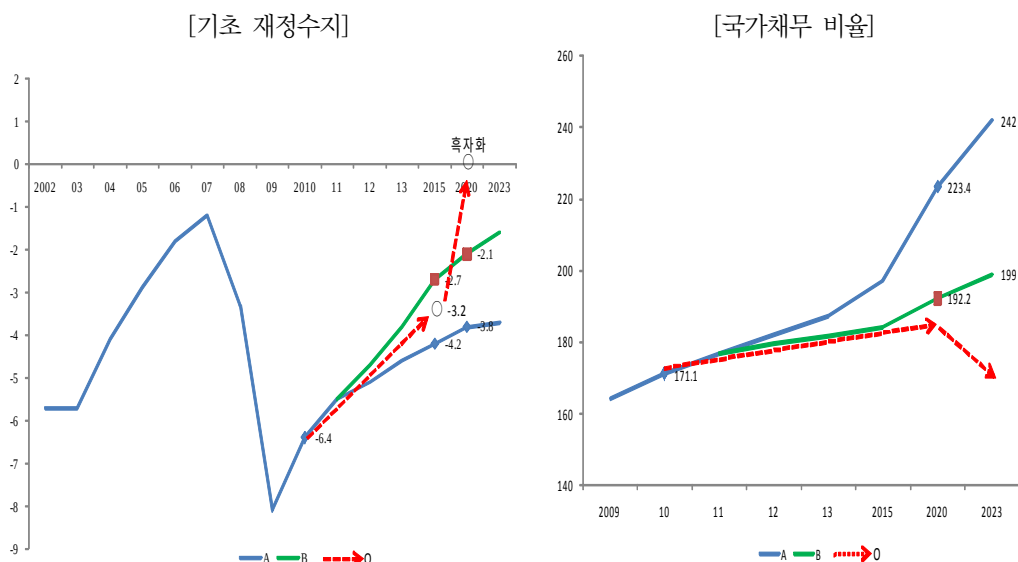
- 그러나 'pay as you go' 원칙은 경기가 악화되어 실업률이 급증할 때에는 국민들의 세출증가 요구로 쉽게 파기될 수 있으며, 실제 미국에서도 1998년 이후에는 이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긴급 지출이 급증하여 재정규칙이 사문화되는 현상이 나타난 바 있음.
- 또한, 일본처럼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가가 재정적자의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 새로운 정책에 대해 적용되는 'pay as you go' 원칙만으로는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

■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 여부 불투명

- 그러나 내각부가 지난 6월 22일 발표한 중장기 시뮬레이션 결과(經濟財政の中長期試算)에 따르면,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2020년까지 기초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고, 2020년 이후 국가채무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춘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
- 이번 중기재정운영전략에 제시된 재정건전화 목표치는 GDP 대비 기초 재정수지 비율을 2010년 -6.4%에서 2015년에는 -3.2%로 낮추고, 2020년에는 흑자화하며, 2021년 이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춘다는 것임.

그림 9. 재정운영전략상 재정건전화 목표와 중장기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단위: GDP 대비, %)



주: 1) A: 저성장 시나리오, B: 고성장 시나리오, O: 정부의 목표

(저성장 시나리오: 2023년까지 평균 명목 경제성장률 1.6~1.7%로 가정하고, 세입측면에서는 현행 세제 유지, 세출측면에서는 기초 재정수지 대상 경비를 2011년부터 기초 엔으로 고정하고, 사회보장비 지출은 2014년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고성장 시나리오: 2023년까지 평균 명목 경제성장률을 3%로 가정하고, 다른 전제들은 저성장 시나리오와 동일)

2) 국가채무 비율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괄하나 사회보장기금의 채무는 제외.

자료: 内閣府(2010. 6. 22), 「經濟財政の中長期試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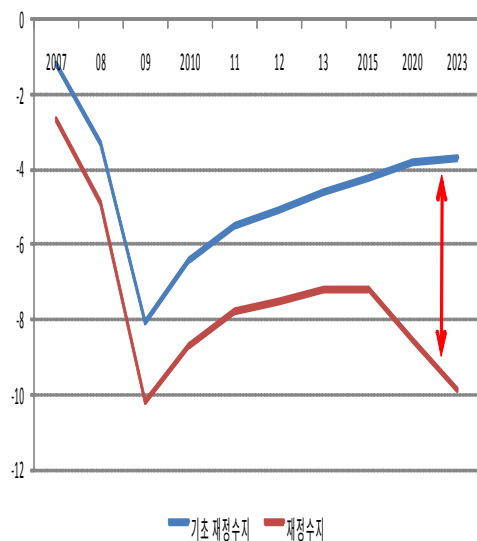
- 이와 같은 내각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세출삭감과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맥락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 저성장 시나리오의 경우 2015년까지는 약 2%의 세율 인상, 2020년까지는 약 8%의 세율 인상이 필요함.

■ 기초 재정수지 관리만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보장에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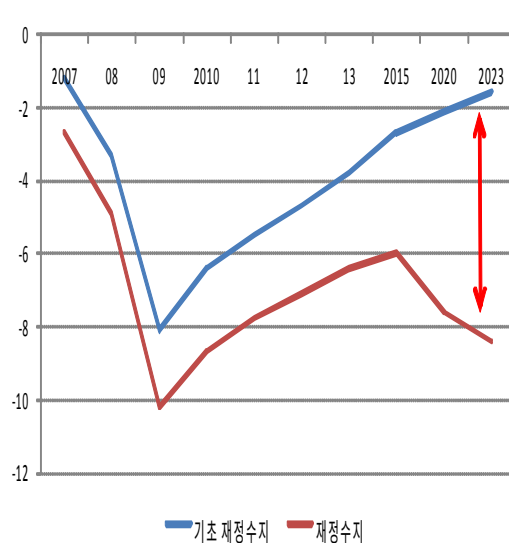
- 이번 중장기 재정운영전략은 기초 재정수지를 핵심 관리 지표로 설정함으로써 목표의 실현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이와 같은 지표관리가 바람직한가라는 문제도 제기됨.
- 정부가 기초 재정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더라도 이는 채무원금이 현상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금리인상에 따른 국채상환비 급증까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 내각부가 지난 6월 22일 발표한 중장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저성장 시나리오든 고성장 시나리오든 2023년까지 기초 재정수지의 흑자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정부가 기초 재정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더라도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임.

그림 8. 내각부의 기초 재정수지와 재정수지에 관한 중장기 전망

[저성장 시나리오]



[고성장 시나리오]



자료 : 内閣府(2010. 6. 22), 「經濟財政の中長期試算」.

4. 시사점

-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은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다소 안정적으로 보이나, 특히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과 같은 단순한 수치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함.
 -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기조, 막대한 대외순자산 보유로 국가부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다, 과도한 국채발행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에 의해 국채상환 부담이 상당히 낮고, 국채의 대부분을 내국인이 보유하고 있어 정부의 국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된 상태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채관리를 소홀히 하면 국가부도 리스크는 차치하더라도 증세나 세출삭감을 통한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전가는 물론 장기적 경제성장 기반 훼손이라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음.
- 지난 10여 년 간 일본의 국가재정운용 과정을 되돌아보면, 장기불황 국면에서 정부가 재정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음.
 - 1995년 재무성(당시, 大蔵省)의 재정위기 선언 이후 시작된 일본의 재정개혁 논의는 1990년대 말의 아시아 금융위기나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경제환경이 악화되면 곧바로 좌절되는 악순환을 경험함.
 - 이번 간 내각이 각의(閣議) 결정한 재정운영전략에 대한 회의론 역시 경기악화 시 과연 정부가 세출삭감 반대 여론을 무마하고 계획대로 재정건전화를 추진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 강화라는 관점에서 일본의 경험은 공공지출의 효과성 제고와 사회보장제도 및 세제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줌.
 - 1990년대 이후 일본정부는 경기회복 명분으로 막대한 공공지출을 단행하였지만 재정규율이 이완된 나머지 정책효과는 거의 없었고 재정적자만 더욱 확대되었음.
 - 또한,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압력은 가중되고 있지만 일본정부는 이렇다 할 사회보장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세 인상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세제개혁에서도 국민적 합의도출에 실패하고 있음. **KIEP**